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2
----------	-------

발의연월일 : 2021. 6. 30.

발 의 자 : 신영대 · 김정호 · 소병훈
박찬대 · 강훈식 · 김교홍
고용진 · 임호선 · 유정주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이하 “토지거래 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외에도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방위시설 인근지역, 원자력발전소·공항 등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설 인근 토지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을 검토하는 등 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를 “그 밖의 국방목적을 위한 구역 및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 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 ----- ----- -----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 ----- -----그 밖의 국 방목적을 위한 구역 및 「통 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 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 등-----

	<hr/> <hr/> <hr/> <hr/>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